

‘누구는 받고, 못받고’...광주·전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여수·순천·영암·해남 4곳서 10만~25만원 지급
광주는 5개 자치단체 지급 결정 단 한곳도 없어
동일생활권 인근 지자체 주민들 형평성 문제 제기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지자체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 중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 해남군 등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씩 총 720억원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생활 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소요 재원은 도로건설 등 계획한 사업을 미루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차입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도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소요액은 285억원으로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해 마련할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정부 3차

지원금과 함께 지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과 해남군도 주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시·군 22곳 중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여수, 순천, 영암, 해남 등 4곳이다.
광주지역 5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광역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일 생활권인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중 일

부 지역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하자 인근 지자체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방역망 구축 차원에서 동조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제철 맞은 함평만 석화 19일 전남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석두마을 어촌계 주민들이 제철을 맞아 살아 통통하게 오른 석화(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제공)

광주·전남 코로나 사망자 1년 만에 20명...치명률 0.94% 대다수 70대 이상 고령...기저질환 보유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 만에 광주·전남지역 사망자수가 20명을 넘어섰다.
치명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1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광주 효정요양병원 입소자인 1419번 확진자가 집중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70대 고령자인 1419번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효정요양병원 관련 광주 1356번 확진자(80대)가 전남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 오다 확진 1주일 만에 숨졌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광주 14명, 전남 6명 등 20명으로 늘게 됐다.

사망자 대다수는 70대 이상 고령자로 폐질환 등 호흡기 관련 질환을 앓거나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초 첫 환자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는 광주가 1460명, 전남이 669명으로 합쳐서 2129명에 달해 치명률은 0.94%로 전국 평균 1.75%를 크게 밑돌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사망자분은 유족 동의 아래 방역 관련 지침에 따라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전남 조류독감에 255만마리 살처분...피해금액 150억원 육박

현재 7개 시·군서 13건 고병원성 확진
닭 159만마리·오리 96만마리 살처분

전남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가 창궐하면서 45일 간 닭과 오리 255만마리를 살처분하고 피해금액이 1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진된 후 현재까지 7개 시·군에서

13건이 발생했다.
이번 조류독감은 기존과 달리 뚜렷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가금류에서 폐사·설사·산란율 감소 등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감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선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조류독감 발생 농장과 인근 3km 내의 살처분 농가 수는 76곳이고, 닭(21농가) 159만마리, 오리(55농가) 96만마리 등 총 255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예정액은 150억원 가량

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은 2018년 이후 3년여 만이다.
최대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2014~2015년에는 13개 시·군에서 107건의 조류독감이 창궐해 191농가에서 378만7000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했다. 피해금액만 607억원에 달한다.
2016~2017년에는 10개 시·군에서 36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116농가를 휩쓸어 213만 8000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고, 피해금액은 318억원이 됐다.

2017~2018년에는 5개 시·군에서 11건이 발생해 40농가 81만2000마리를 살처분했고 피해금액은 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번 조류독감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조류독감은 뚜렷한 증상이 없는 데다 감염경로 추적도 쉽지 않아 차단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